

이재명, 전·현직 원내대표 만나 “분열 필패, 단결 필승”

민주당 오찬 간담회...친명·비명계 전원 참석 당내 통합 다져 “집권 세력 폭정 바로 잡고 민생 회복 집중...반드시 총선 승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분열은 필패고 단결은 필승이란 각오로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현직 원내대표와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하고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었는데 많은 분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잘못된 국정 운영을 심판해야 국가의 퇴행과 우리 국민들의 불행은 막을 수 있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합하고 단결해서 국민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가결 이후 비명(비이재명)계 정계 문제를 둘러싼 내홍을 해결해야 총선 승리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3일에도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월가월부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어 공세의 날을 더욱 세웠다. 그는 “새삼 강조할 필요 없이 우리 대한

민국이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이라며 “무능한 정권이 사정 통치, 그리고 이념 선동에 빠져 있는 사이에 우리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국정과 국가 시스템이 작동 불능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정부 상태라는 표현이 많이 회자하고 있다”며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고통에 빠진 국민들을 반드시 구해내야 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집권 세력의 폭정을 바로 잡고 또 국민 민복에 당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겠다”며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단단하고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은 단순히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선거”라며 “민주당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단합하고 단결해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상호·우원식·홍영표·이인영·김태년·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현직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사무총장, 박홍근·김태년·홍영표·이상호 전 원내대표, 이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우원식·이인영·윤호중·박광은 전 원내대표,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연합뉴스

박홍근·박광은 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진명(진이재명)계는 물론, 대표적 비명계인 홍 전 원내대표까지 참석하는 만큼 당내 통합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호남 정치인 ‘민주 지도부’ 입성하나

이르면 오늘 최고위원·정책위의장 인선...이재호·김성주 등 하마평

더불어민주당 공식인 지명지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인선을 앞두고 호남 정치인의 지도부 입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 한 석은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후 송갑석(서구갑) 전 최고위원이 사임 한 뒤 두 달 가량 공석이다. 여기에 지난달 말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민석 정책위의장 후임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26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27일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번 인선은 이 대표가 당무 복구 일선으로 내놓은 ‘통합’의 가능자로서 여겨지는 만큼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인선의 핵심 키워드는 ‘지역 안배’가 될 전망이다. 특히 현 지도부가 수도권 일색으로 호남·충청 출신 인사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지역 인물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주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원 후보로 알려진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전수미 변호사는 각각 대전, 전북 군산 출신이다. 정책위의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이재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은 모두 호남 인사다.

충청과 호남을 모두 배려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의지가 강한 만큼, 두 지역에 당직을 한 자리씩 안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도부의 한 인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 자리가 충청권 인사로 낙점되면 나머지 자리는 자연

스럽게 호남권 인사로 정해질 것”이라며 “현재 충청 최고위원, 호남 정책위의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 친명계 한 국회의원은 “현재 다수의 호남 출신 여성이 최고위원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당무 복구 후 내부 통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계파 안배 역시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명지 최고위원에 진명(진이재명)계인 것으로 알려진 박 전 구정장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당내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잠잠해진 계파 갈등이 최고위원 인선을 고려로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계파까지 안배한 인선을 내놓을 것이라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현재 “21대 총선 순천 선거구 확정 합헌”

“인구편차 줄이고 대표성 반영”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나누고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확정지침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현재는 26일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했다.

2020년 3월 개정된 선거법 25조 3항 별표1 등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순천시 기준 인구가 상한선(27만명)을 넘겨 선거구를 2개로 나누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인구 5만5000명인 해동면이 인접한 광양시로 통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해동면 유권자는 순천이 아닌 광양·

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뺀게 돼 반발이 이어졌다.

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출마자들은 이 같은 확정지침이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입후보를 제한하는 등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는 이에 대해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면서 기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고 기각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국감 브리핑

“이주민예술인 지원해 문화 다양성 높여야”

이재호 “법 지원 근거 없어 제약”

국내 거주 220만여 명의 외국인 중 예술 분야에 대한 조예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주민 예술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들을 예술인으로서 대우·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어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26일 문체부 국감자료에서 “예술진흥(E-6) 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주민 예술인 3910명, 취업(E-7)·거주(F-2)·단기취업(C-4) 비자를 받은 이주민 예술인 상당수가 국내 체류 중이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주여성의 윤락행위 강요와 같은 불법



행위 등 출입국관리규칙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까지는 예술인 입국자 수가 줄었지만 지난해부터 한류 붐으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이주민 예술인 수가 증가 추세이다.

하지만 이주민예술인의 법적 지위는 현행법 상 단기간 활동하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으로 성격이 강해 예술가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호 의원은 “우리와는 다른 이주민예술인들의 문화적 배경과 창작 활동을 한류와 연계한다면 더 큰 문화적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불씨 살렸다

김원이, 복지부장관 답변 받아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26일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대 신설 프로세스는 별도로 가동할 것’과 ‘지역 의대 설립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은 조규홍 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발표한 예정인 ‘의대정원 수요조사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정원) 수용 능력만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조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대가 없는 전남은 어떻게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할 것인가”를 질의했다. 조 장



관은 “우선 현행 의대 위주로 조사를 하고, 지역 의대 설립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 자리에서 김원이 의원은 정부가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원 50명 이하 ‘미니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미니의대 총 17개 중 수도권에 대학병·협력병원이 있는 대학이 9개나 된다. 미니의대 정원만 늘린다면 지방의대 졸업생을 받아들일 위상이 크다”면서 “전남에서 양성하고 지역 부속 병원에서 수련시켜야 추후 그 지역에서 근무할 것이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법제처

2023

10월의 입법예고 법령안

알기 쉬운

국민참여입법센터 바로가기!
(https://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4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 이후 주택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고,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상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무주택 거주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형·저가주택

가격 기준
상향 및 적용
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94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은 농약 불검출을 구비조건으로 하고 있어, 비료에 의한 클날름 등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미량의 농약 검출도 허용하지 않아,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
개선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62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료보호기관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및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치료보호 판별검사 기준 중핵사항을 식재하고 치료보호 지정기준을 실효성이 있도록 보완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의무화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8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3 부모요양직 제도 6+6 부모요양직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조기재취업수당을 우대 지원하는 등 영야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3+3 부모요양직 제도

6+6 부모
요양직제도
확대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87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쟁연속 금지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도모하고,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 조정의 결과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자신사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과징금 감정 상한선 기준 50%에서 70%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사업자의
경쟁활동 간섭

경쟁연속
금지유형
구체화

과징금
감정상한
확대

법무부공고제2023-36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되어 스토킹 행위자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구체적 집행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스토킹 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구체적
집행 절차
마련

법무부공고제2023-119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 연기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부담 치료대상자에 대한 세부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당선인

병역의무
이행 연기
기준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890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을 제정함으로써, 연구개발로 산출되는 연구성과물의 디지털 자산화를 촉진하고,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
법률 제정

법령정보요청 새창